

## I. 들어가는 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는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에서 수위를 달린다. 이들 국가는 세계자유보고서, 부패인식지수, 청렴지수 등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개, 정보접근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례로 해당 나라별로 언론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일 년에 한 건 일어날까 하는 수준이다. 국가총생산의 절반가량이 공공에서 나오고 관련 정보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공개된다.

누구 말마따나 ‘언론인의 유토피아’라고 불릴 만하다. 하지만 폭넓은 정보공개와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북유럽에서는 언론에 공개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증재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번 연구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언론 행태와 피해 구제 제도를 다룬다. 앞부분에서는 두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형성된 시기를 공통으로 다룬다. 1809년까지 스웨덴과 핀란드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개념의 등장과 발전을 묶어서 다뤘다. 현재는 물론 각각 독립된 나라이고, 언어와 민족도 다르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은 문화, 제도, 법제와 언론 환경까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옛말이 되었지만 인구수 대비 신문 구독자가 많고, 지역지가 발달한 것도 비슷하다. 언론 환경과 뉴스 이용 행태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종이신문 구독자가 줄고 대부분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

\*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hasoojeong@gmail.com)

\*\* 홍지현 북유럽연구소 선임연구원(jihyuna.mohae@gmail.com)

스를 접하지만 여전히 타 대륙, 심지어 유럽 안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뉴스 소비가 많은 편이다. 이런 공통점을 배경지식으로 놓고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의 언론피해 사례와 구제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웨덴은 온라인 미디어라고 해도 전통 미디어의 온라인 버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문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했다. 2017년 노벨위원회 위원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명시로 본 언론의 보도 행태, 스웨덴에서 시작된 언론 옴부즈만 제도와 소송 사례를 통해 스웨덴의 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018년 9월 스웨덴 총선 직전 퍼진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도 정리했다.

핀란드 편에서는 요즘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언론과 혐오 발언이 언론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법체계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폈다. 2014년 5월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흥미롭다. 온라인 괴롭힘, 오보와 정정보도 사례, 명예훼손 사건의 핀란드 법정과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자세히 담았다.

## II. 스웨덴과 핀란드 언론의 자유

### 1. 언론의 자유 역사의 시작

1809년까지 스웨덴의 동부 지방으로 스웨덴과 하나의 나라였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 역사의 시작이 동일하다. 1766년에 귀족, 성직자, 시민, 농부로 구성된 스웨덴 왕국의 의회를 거쳐 스웨덴 왕 아돌프 프레드릭(Adolf Fredrik)이 공포한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보장한 세계 최초의 법(His Majesty's Gracious Ordinance relating to Freedom of Writing and of the Press)<sup>1)</sup>이 그 시작이다(Helsingin Sanomat Foundation & Anders Chydenius Foundation, n.d.).

이 법은 사전 검열을 폐지하여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사전 검열 폐지는 글의 저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판인이 글의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

---

1) 영어로 번역된 1776년 법안 전문: <http://www.peterforsskal.info/documents/1766-translation.pdf>

다. 예외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글들은 사전 검열이 시행되었으며, 왕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일반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다.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시민들에게 행정과 사법 문서의 열람권을 보장하였다. 이 법은 그 당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정치적 상황이 낳은 우연의 결과물로 인식되기도 한다(ibid.).

성직자이면서 핀란드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던 안데르스 쉬테니우스(Aders Chydenius)가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개방성과 토론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언론자유법은 6년간만 유효했으며 1772년 구스타프 3세(Gustav III)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북유럽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기반이 되었다(ibid.).

언론자유법 제정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당시의 유럽의 시대적 상황이 이끌어 준 기회라는 점에서 법 제정에 관여한 의회나 정치인인 쉬테니우스의 역할보다는 또 다른 핀란드인인 페테르 포르스콜(Peter Forsskål)이 쓴, 1759년에 출판된 시민 자유에 대한 생각(Thoughts on Civil Liberty)<sup>2)</sup>이라는 21절로 된 팸플릿에 공을 돌리기도 한다. 포르스콜의 팸플릿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문 제기 및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등 위험한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과 동시에 바로 판매 금지되었지만, 1766년 언론자유법 제정에 지대한 영감을 주었다(Goldberg, 2017).

## 2. 스웨덴과 다른 핀란드의 역사: 제정 러시아, 소련, 러시아가 핀란드에 미친 영향

1809년 스웨덴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스웨덴의 동쪽인 지금의 핀란드는 러시아 대공국의 자치령으로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였다. 이로써 핀란드와 스웨덴의 언론의 자유 역사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러시아는 1804년부터 검열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핀란드도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스웨덴은 1809년의 새로운 언론자유법 제정 후,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Nordenstreng, 2017).

---

2) 포르스콜의 팸플릿 영문 번역본: <http://www.peterforsskal.com/thetext.html>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역사적 친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핀란드의 민족주의를 장려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지배 시절 핀란드에는 사전 검열이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핀란드의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하나의 독립된 나라의 꿈을 키우게 했다. 이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레닌의 개인적 지지로 핀란드는 1917년 독립하게 된다. 독립 후에도 핀란드는 내전, 소련과의 두 번의 전쟁, 그리고 냉전시대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련의 눈치를 봤다(ibid.).

안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발달해온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냉전시대에 소련과의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에게 강요된 중립적 태도와 1968년에 설립된 대중매체협의회, 율끼쎄 썬넨 네우보쓰또(Julkisen sanan neuvosto, JSN, in English, Council for Mass Media)의 언론 자율규제의 경험이 오늘날 핀란드의 발달된 언론환경의 밑거름이 되었다. 굳건한 공교육, 러시아와 균형을 이룬 오랜 역사를 통해 길러진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괄된 대응은 최근 몇 년 간의 러시아 트롤 공격에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핀란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Standish, 2017).

1766년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세계 최초로 보장한 법의 개념은 핀란드의 언론과 정보에 관한 핵심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시대별 정치적 상황에 따라 1766년에 제정된 법과 현실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핀란드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핀란드 정부의 가장 큰 밑거름이 1766년에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 III. 스웨덴의 언론구제 제도와 주요 판결

#### 1. 스웨덴 미디어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현황

2018년 10월 1일은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수상자 발표보다 주목 받은 뉴스가 있었다. 스웨덴 노벨 위원회 위원이자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강간 유죄 판결<sup>3)</sup>이었다.

[그림 1] “18명 여성: 문화계 유력인사의 성폭력을 털어놓다.”  
2017년 11월 24일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에 실린 기사



UPPDATERAD 2017-11-24 PUBLICERAD 2017-11-21

Arton kvinnor anklagar en central person i svenskt kulturliv för sexuella trakasserier och övergrepp.

2017년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번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2011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문화계의 유력인사인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 이후 무려 18명의 여성이 같은 인물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를 통해 공개했다<sup>4)</sup>. 이후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와

3) Russell, D. (2018, 10, 1). Cultural profile linked to Swedish Academy found guilty of rape. <Sverige Radio>.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7056689>

4) Gustavsson, M. (2017, 11, 21). 18 kvinnor: Kulturprofil har utsatt oss för övergrepp.

증언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해 유추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는 노벨위원회 위원으로 스웨덴 한림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라고 알려졌다. 스웨덴 한림원은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다. 피해 사실이 퍼지고 진위를 가리는 사이 한림원은 내분으로 뿌리까지 흔들렸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는 노벨상 수상자 선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벨위원회 위원이고, 그의 부인은 한림원의 종신회원이었다. 피의자는 노벨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학 클럽을 운영했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그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던 젊은 회원들이었다<sup>5)</sup>. 몇몇은 피의자에게 노벨상 후보와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노벨상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향후 50년간 일체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노벨 재단의 원칙이다. 일련의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노벨상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스웨덴의 왕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설 정도로 수개월을 끈 대형 뉴스였다. 결국 스웨덴 한림원은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강간 사건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명을, 때로는 얼굴까지 공개한 반면 기사 어디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이 없었다. 신문, TV, 라디오 가릴 것 없이 피의자는 줄곧 ‘문화계 인사(Kulturprofilen)’로 불렸다. 간혹 ‘문화계 핵심 인사’, ‘한림원의 회원과 밀접한 관계’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일절 없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요즘은 다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제공한다. 어느 한 곳에서 특종을 터뜨리면 다른 곳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소위 ‘받아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뉴스 제작 풍토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같은 사안이라도 매체마다 가이드라인과 접근법이 달라 공개 범위와 시기도 각기 다르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공개 시기가 달랐는데, 문화계 인사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8년 6월 12일 검사가 해당 인물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된 후에야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

---

<Dagens Nyheter>. <https://www.dn.se/kultur-noje/18-kvinnor-kulturprofil-har-utsatt-oss-for-overgrepp>

5) Farran-Lee, L. (2017, 11, 22). Kulturprofilens klubb håller stängt - hänvisar till sjukdom. <SVT>. <https://www.svt.se/kultur/bok/sara-danius-vill-kapa-samarbete-med-kulturprofilens-klubb-1>


같은 대중지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고급지인 ‘다겐스 뉘헤테르’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는 10월 1일 법원 판결이 나고서야 실명을 쓰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이 가장 빨랐다. 2018년 5월 4일 스웨덴 국영방송인 SVT에서 18명의 피해자의 고백을 취재한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자 마틸다 구스타프손(Matilda Gustavsson)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피의자의 실명이 나왔다. 같은 날 SVT는 뉴스를 통해 “만약 장 끌로드 아노가 그 문화계 인사가 맞다면 스웨덴 한림원의 신뢰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실명을 언급했다.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노르웨이는 더 빨랐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뉴스 사이트인 ‘베르덴스강(Verdens Gang)’은 스웨덴 TV보다 빠른 2018년 4월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이름을 공개했다<sup>6)</sup>.

[그림 2] 2018년 4월 12일자 노르웨이 미디어 ‘베르덴스강’에 스웨덴을 뒤쫓는 노벨 위원회 강간 사건의 피의자 이름이 먼저 공개되었다

**VG** Sporten VG Live TV-guide VG+ Tips oss jean-claude 1/1

## Svenske tilstander

Nobelprisen i litteratur for 2018 tildeles Svenska Akademien for den aristokratiske splatterfarsen «De Aderton», en ublu beretelse om åndgemeng i Føydalhemmet.

 YNGVE KVISTAD

12.04.18 12:30 • Oppdatert: 12.04.18 20:15

hven som får Nobelprisen i litteratur for vinneren er blitt offentliggjort. Dette peker tilbake på hans hustru, som er underlagt et strengt [taushetsregime i henhold til De Adertons nedfalte lover](#), de såkalte Statuttene. De er like gamle som Svenska Akademien selv, og forvaltes av institusjonens høye beskytter: Kungen av Sverige.

**LES OGSÅ**  
Svenskekongen bekymret over krisen i Svenska Akademien

**Kulturprofilen Jean-Claude Arnault** er en nær venn av flere medlemmer i Svenska Akademien. Han er gift med poeten Katarina Frostenson som sitter på akademiets 18. stol.

En av De Adertons mest kjente profiler i senere år, er litteraten Horace Engdahl. Han var frem til 2009 akademiets faste sekretær (stående sekretærer), det vil si talsmann og *primus inter pares*, fremst blant likemenn. I et [oppsiktsvekkende innlegg i Expressen](#) nylig tok han et rasende oppgjør med dem som har fremsatt sex-anklager mot Arnault og – ikke minst – de i Svenska Akademien som har tillatt seg å fremme kritikk mot ekteparet.

**Nå er situasjonen den** at tre av Akademiens mest kjente og erfarne medlemmer har trukket seg i protest. Fra før står to stoler tom når De Aderton samles. Forsvinner en til er de ikke beslutningsdyktige.

6) Kvistad, Y. (2018, 4, 12). Svenske tilstander. <Verdens Gang>. <https://www.vg.no/nyheter/meninger/i/11blKe/svenske-tilstander>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상대의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 이미 노르웨이 매체가 4월에 공개한 이름인 데다, 시간차를 두고 이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만 하면 나오는 자료인데 스웨덴 신문이 고집스레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 2. 명예훼손과 모욕죄

스웨덴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sup>7)</sup>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 형법 제5장 제1조 명예훼손

*누군가를 범죄자, 비난받을 만한 존재로 지목하거나 타인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 경우 정황상 공표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공표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 정보가 사실이거나 그렇게 여길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한다.*

*만약 내용이 심각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다수에 전파될 경우 이것이 가져올 피해를 계산해 가중처벌하며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금고형에 처한다.*

### (2) 형법 제5장 제3조 모욕

*상대를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로 비방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비난할 경우,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때 모욕죄로 규정하며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최대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한다.*

*모욕은 상대의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명예훼손은 대상이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

7) 스웨덴 ‘형법’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국제언론기구 영문 번역본을 따랐다.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5). ‘Criminal Defamation’, Media Laws Database.  
<http://legaldatabase.freemedia.at/legal-database/sweden>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두 종류의 법에서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인쇄 매체와 시청각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담고 있다. 헌법의 내용도 형법과 같으며 처벌은 형법에 따라 이뤄진다.

### (3)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입헌군주제인 스웨덴은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형법 제18장 제2조에 따로 정의하고 있다. 내용은 같으나 왕족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장 4년, 가중처벌의 경우 6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 (4) 명예훼손 판결 현황

2015년 기준 스웨덴에서 1년간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총 14건이며 명예훼손 가중처벌은 10건, 모욕은 19건이다. 여기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1건이다. 스웨덴에 명예훼손으로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적은 것은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안테 라겐<sup>8)</sup>’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고소를 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당해 고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불만이나 반론이 있으면 법정에 가기보다는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이나 스웨덴 방송공사(Myndigheten för radio och tv)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프레스 옴부즈만은 이럴 경우 정정보도나 사과를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와 해당 신문과 잡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에 대한 중재는 프레스 옴부즈만이, 방송과 라디오 뉴스에 대한 중재는 스웨덴 방송공사가 담당한다. 여기서는 프레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

8) 안테라겐(Jantelagen), 즉 안테의 규범은 20세기 초 덴마크 출신 작가 악셀 산테모세의 소설에서 처음 나왔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하는 ‘안테’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지키는 11가지 도덕률이다. 북유럽식 평등을 상징하는 말이다.

### 3. 언론중재기구

#### (1) 프레스 옴부즈만

옴부즈만(Ombudsman)이 스웨덴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옴부즈만은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행정 감찰관으로도 불리는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과거 조선의 암행어사와 비슷한 역할이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옴부즈만이라 부르며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1969년부터 운영한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 이하 PO라고 한다)은 개인과 언론사 사이의 1단계 중재 역할을 맡는다. 시민이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PO에게 제기한다. PO는 인쇄매체의 보도 행태가 저널리즘 윤리에 벗어났는지 그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중립에 서서 판단한 후 스웨덴언론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이하 PON이라고 한다)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PON은 최고 2,000크로나(약 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한다.

개인이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대응해 법정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PO에게 요청하면 된다. 비용 부담이 없으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PO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뉴스로 인한 여타 피해사실을 바로잡음으로써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석 국회 옴부즈만<sup>9)</sup>, 스웨덴 법조인회 의장, 출판연합위원회 의장이 협의해 PO를 임명한다. PO는 자율적 비정부기관으로 운영 재원은 언론인클럽(Publicistklubben), 스웨덴기자협회(Svenska Journalistförbundet), 스웨덴 발행인협회(Svenska Tidningsutgivareföreningen), 스웨덴 잡지 발행인협회(Sveriges Tidskrifter)에서 나온다.

---

9) Chef JO(Chefsjustitieombudsmannen): 스웨덴 국회에는 언론, 재정, 건강/복지, 법조 등 총 네 가지 영역을 각기 관할하는 옴부즈만이 있는데 수석 옴부즈만은 이들을 대표하는 옴부즈만을 뜻한다.

## (2) 프레스 옴부즈만의 역사

언론에 대한 불만은 언론의 탄생 때부터 있었다. 1916년 PON이 발족했다. 언론 종사자 내부의 문제의식과 언론윤리 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자체적으로 형성한 조직이다. 시민이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좀 더 손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1969년 프레스 옴부즈만을 시작했다. 이후 크고 작은 불만이 계속 접수되었고 1975년에는 인원을 늘려 기능을 확대했다. 초기에는 PO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사안을 정리하고 의견을 담아 PON에 보냈다. 1993년부터 PO의 권한이 커졌다. 개인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뉴스에 한해 PO가 사건을 조사하고 문제 제기자와 언론사 간의 중재를 시도해 언론사에 요청하면 언론사는 2주 안에 PO의 중재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 프레스 옴부즈만은 2011년에 임명된 올라 식바르손(Ola Sigvardsson)이다. 식바르손은 전 '다겐스 뉴헤테르' 편집장이다. 1969년부터 임명된 PO는 지금까지 7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7년이며 초기에는 변호사가 PO를 맡았으나 1993년부터는 줄곧 언론인이 맡고 있다. 1969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 PO에 접수된 정정보도 요청은 14,500건<sup>10)</sup>이다. 현재 한 해에 평균 450여 건의 불만이 접수되는데 대부분 기각된다.

## 4. 언론사 소송 판례

### (1) 페르스브란트 vs. 엑스프레센(2006년 12월, 스톡홀름)

2005년 스웨덴의 대중지 '엑스프레센(Expressen)'에는 영화배우인 미카엘 페르스브란트(Mikael Persbrandt)가 알코올 중독으로 읍살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엑스프레센<sup>11)</sup>은 스웨덴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다. 페르스브란트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엑스프레센은 실수를 인정하며

---

10) Bergling, M. & von Krogh, T & Nejman, F. 40 år av övertramp PO/PON 1969-2009(2009), Juridisk reportagebyrå, ISBN 978-91-85333-28-8.

11) The statistics Portal (2014). Ranking of daily newspapers in Sweden by circulation in 201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43045/ranking-of-daily-newspapers-in-sweden-by-circulation>

잘못된 정보였다고 사과 보도를 했다. 페르스브란트는 사과 보도 후 엑스프레센에 손해 배상액 500,000크로나(약 6,328만 원)를 요구했다. 검사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사 심의도 동시에 진행했다. 엑스프레센의 편집장인 오토 회베리(Otto Sjöberg)는 법정에서 신문사의 명성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엑스프레센의 변호사는 페르스브란트가 과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비록 병원에 입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 기사로 페르스브란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명의 배심원은 엑스프레센을 대표해 출석한 회베리에게 증대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80,000크로나(약 1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페르스브란트에게 손해 배상으로 75,000크로나(약 95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 휘만 vs. 엑스프레센

2001년 스웨덴 좌파당의 대표인 구드룬 휘만(Gudrun Schyman)이 엑스프레센의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구드룬 휘만이 전남편과 함께 에로틱 영화 ‘흥분할 수밖에’에 출연했다(Gudrun Schyman spelar in erotisk film tillsammans med sin ex-man: ‘Man ska bli kåt)’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제목을 보면 마치 휘만이 포르노에 출연한 것 같은 뉘앙스였다.

사실 이 영화는 휘만의 전남편이 감독한 다큐멘터리로 휘만과의 친밀한 대화를 담은 것이다. ‘흥분할 수밖에’는 사실 화가 나서 흥분한다는 의미였는데 엑스프레센이 교묘하게 오도했다는 것이다<sup>12)</sup>. 이 기사가 나간 후 사람들은 휘만이 포르노영화에 출연한 줄 알고 걱정하며 묻거나 당대표에서 내려오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엑스프레센은 에로틱 영화는 포르노와 다르며 ‘흥분할 수밖에’는 휘만의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항변했다. 또 개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웨덴 대법원은 엑스프레센의 제목이 휘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엑스프레센은 휘만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크로나(약 630만 원)를, 벌금으로 60,000크로나(약 760만 원)를 내라고 판결했

---

12) Ritzén, J. (2003, 3, 1). ‘Schyman föll i gråt i rätten. <Aftonbladet>  
<https://www.aftonbladet.se/nyheter/a/ngWkKL/schyman-foll-i-grat-i-ratten>

다<sup>13)</sup>. 한편 휘만은 언론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으며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대는 것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 (3) 휘테달 vs. 다겐스 뉘헤테르

최근 스웨덴 기독교민주당 의원인 사라 휘테달(Sara Skyttedal)과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뉘헤테르’ 사이에 법정 다툼이 있었다. 휘테달은 다겐스 뉘헤테르가 허락 없이 자신의 SNS에서 개인적 사진을 가져다 실었다며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겐스 뉘헤테르는 총 열 장의 사진을 온라인 기사에 사용했는데 그 중 휘테달이 이스라엘 장갑차 앞에서 자세를 잡은 이미지가 있었다. 사진이 공개된 후 휘테달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다겐스 뉘헤테르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휘테달은 전체 공개로 사진을 올렸으며, 다겐스 뉘헤테르는 중동 분쟁을 다룬 기사에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당의 핵심 인물이 중동의 군용 차량 앞에서 찍은 사진을 기사에 공개하는 것은 대중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sup>14)</sup>다.

## 5. 언론 보도 준칙

스웨덴 언론의 신중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스웨덴 뉴스를 보면서 늘 의아하게 여겼던 점이 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기사에 용의자의 이름이 없다. 기껏 지칭하는 표현이 나이 정도다. “서른 두 살짜리”, 스웨덴에 서른 두 살짜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별의 구분도 없이 나이로만 지칭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근에 도입한 규정도 아니다. 수십 년 된 전통이다.

---

13) TT (2003, 12, 5). Expressens löpsedel om Schyman var förtal. <Expressen>.

<https://www.expressen.se/nyheter/expressens-lopsedel-om-schyman-var-fortal>

14) Jeppsson, J (2018, 10, 5). Sara Skyttedal tvingas betala 522 000 kronor: Oerhört tungt. <Aftonbladet>

<https://www.aftonbladet.se/nyheter/a/0Ey59G/sara-skyttedal-tvingas-betala-522-000-kronor-oerhort-tung>

1986년 당시 스웨덴의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가 수도인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 언론은 초기에 검거된 용의자를 “서른 두 살짜리(32-åringen)”라고 명기했다. 그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일이 지나 더 이상 서른 두 살이 아니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서른 세 살짜리”로 바꾸어 보도했다.

스웨덴 언론이 피의자나 용의자를 비롯한 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에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법이 정한 강제성 때문이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하다.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도 없다. 법원도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기자들 스스로가 깐깐하게 자기 검열을 한다. 스웨덴 언론이 개인 정보 공개를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한 자체 규율과 언론윤리 때문이다.

스웨덴은 1923년에 언론인 윤리규범을 채택하였으며, 현재의 언론인 윤리규범은 1997년에 개정된 것이다. 언론평의회(Press Council)를 설치한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1969년에는 프레스 옴부즈만(Press Ombudsman)을 설치하였다.

브릿 보르예손(Britt Börjesson) 예테보리대학 미디어 윤리 교수는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통은 진실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의자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언론을 통해 이름이 드러나면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들이 과거를 씻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이름을 신지 않는 일종의 합의를 이룬 것이다<sup>15)</sup>.

2018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갖춘 나라에 올랐다<sup>16)</sup>. 스웨덴은 1766년 세계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로, 기타 여러 통계로 볼 때 언론이 권력이나

---

15) Landes, D. (2009, 2, 23). What's in a name: crime suspects and the Swedish press.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90223/17716>

16)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Freedom of Information (2018). 2018 World Press Freedom Index. <https://rsf.org/en/ranking>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공개할 가치가 있으면 보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미디어가 실제로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자체 규율이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다.

이 자체 규율의 단초는 1923년 일명 PK라 불리던 스웨덴 언론클럽(Publicistklubben)에서 찾을 수 있다. 1965년 스웨덴언론노조(Svenska Journalistförbundet)는 언론인 행동강령을 채택했고, 이어서 옴브즈만과 함께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피의자의 이름을 적시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은 이때부터 담겨 있었다. 아래는 윤리 규정의 일부다.

“만약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치게 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공개하는 것이 명백하게 공공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해가 될 경우 이름을 쓰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철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과도하게 주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율은 오랜 시간 편집국은 물론 언론사 전체와 사회에 뿌리내렸다. 직업윤리에 충실한 것은 언론인이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다. 의사나 변호사가 반드시 해당 과정을 전공한 후에야 자격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스웨덴의 기자는 대부분 저널리즘 과정을 거친 후 언론사에 들어간다.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저널리즘 학과 또는 저널리즘 학교가 개설되었다. 저널리즘 과정은 언론인의 윤리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감시사이자 어떤 계층에도 속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제3자로서 사안을 대해야 한다’<sup>17)</sup>는 것이 핵심이다.

## 6. 보도 준칙에 대한 평가와 의미

보수적인 보도 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덕이 크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웨덴 인구의 절반가량이 신문을 구독했는데 중앙지와 지역지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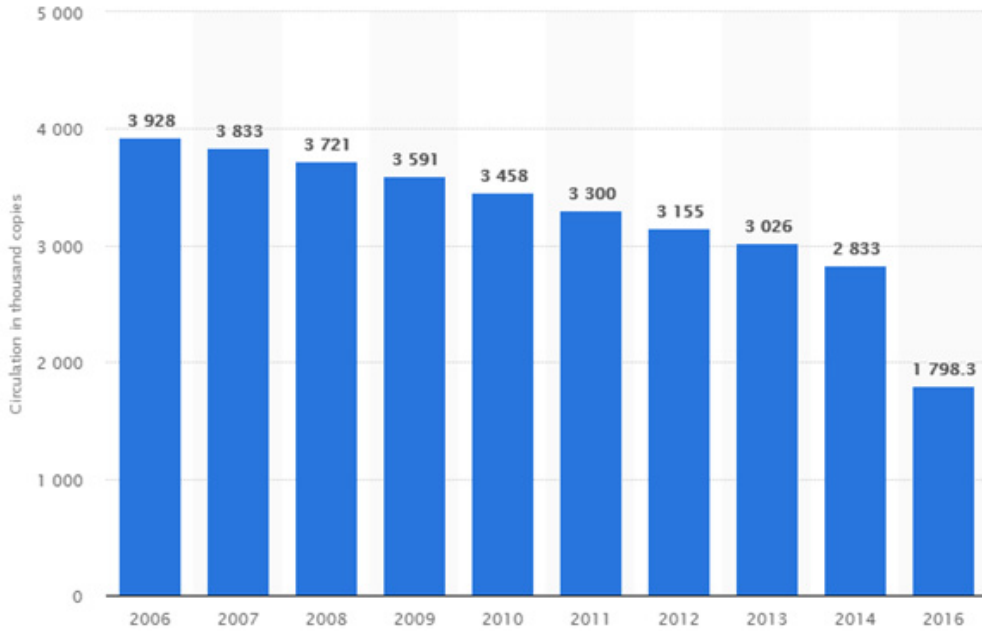
---

17) Wadbring, I & Ohlsson, J (2018). Media Landscapes Expert Analysis of the state of media: Sweden. <European Journalism Centre>. <https://medialandscapes.org/country/sweden>

많았다. 구독하지 않더라도 가판 구입이 많아 최근까지도 퇴근 무렵 편의점 앞에 줄을 서서 석간신문을 사는 풍경이 흔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종이신문 구독의 하락세가 이어지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감해 현재 일간지 발행부수는 약 1,798,300 부로 인구의 18% 정도가 신문을 구독<sup>18)</sup>한다.

[그림 3] 스웨덴 일간지 유료 부수(2006~2016년)

(단위: 천)



Data visualized by + a b l e a u

© Statista 2018

현재는 다수의 독자가 디지털 뉴스로 넘어갔다. 디지털 뉴스의 수익구조는 대중지와 고급지가 확연하게 갈린다. 1830년에 창간한 스웨덴 최초의 신문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판인 아프톤블라뎃(Aftonbladet)과 그 뒤를 잇는 익스프레센(Expressen)은 기사를 전문 공개하는 대신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반면 고급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나 스벤스카 다그블라뎃(Svenska Dagbladet)

18) The statistics Portal (2014). Ranking of daily newspapers in Sweden by circulation in 2014.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43045/ranking-of-daily-newspapers-in-sweden-by-circulation>

은 유료 구독자만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속보 경쟁이나 자극성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의 ‘문화계 인사’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전에 몇몇 미디어에서 이름을 공개했다. 기소가 확정된 후였고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사회라 법원 문서에 실명이 다 나와 있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이니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종이 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는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기사에 이름을 썼다. 현장 기자들은 이것을 언론인의 윤리라고 표현한다. 이미 다른 매체에서 이름이 다 공개된 상황에도 전통 미디어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별스러운 자기검열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기사의 기본이 사실 적시인데 의도를 갖고 주요 정보를 누락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올로프 팔메 암살 사건을 예로 들어 당시 스웨덴의 모든 서른 두 살짜리를 용의자로 보기보다 이름을 적시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용의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나서면 오히려 독자와 시청자가 나서서 기사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스웨덴 뉴스에 총기 살인 사건이 자주 등장했다. 스웨덴 경찰청의 통계를 보아도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과 범죄조직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총기 사고를 전할 때에도 여전히 나이와 성별 이외에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인종이나 직업 등의 개인 정보가 따라 붙기 마련인데 찾기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다.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개인의 인권에 무게를 둔 것이다.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의 기자인 클라스 스반(Clas Svahn)은 “사건 기사를 쓸 때 용의자의 나이와 성별 이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스웨덴 기사는 용의자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명제에 충실하다.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스웨덴 기사는 사건을 다룰 때 일부러 용의자 또는 범인의 인종적 배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민자 범죄가 느는 것은 사실이나 자칫 사람들 사이에 ‘이민자는 곧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싹트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 7. 보도 행태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노력

이런 태도는 스웨덴 당국과 국영 매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당국과 국영 매체는 ‘이민자’라는 단어 대신 ‘해외 배경(Utländsk bakgrund)’이라는 용어를 쓴다. 통계청 인구 자료에도 이민자 대신 ‘해외 배경’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스웨덴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이민자를 꾸준히 받아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쿠르드, 이라크, 시리아 등 주로 중동의 분쟁지역에서 난민자격으로 스웨덴에 오는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6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1천만 인구 스웨덴에 일 년 사이 1.6%의 이민자가 들어온 셈이다. 주로 분쟁지역의 인도주의적 이민인데 현재 전체 인구의 25%가 이민자 또는 이민 2세대 출신이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사회였다. 인종도 단일하고 합의주의 전통이 깊어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한다. 여기에 다른 생김새에 다른 문화를 가진 다수가 사회에 흡수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자 언어나 종교가 비슷한 그룹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생겨났다. 스톡홀름 교외 지역의 학교에는 전교생이 이민자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에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복지 예산을 거덜내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선동 탓도 크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특정 그룹의 탓으로 돌리며 분열된 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사회 통합에 온 힘을 쏟는 이유다.

스웨덴 정부는 사회통합부를 신설해 전방위로 사회통합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민자 대신 ‘해외 배경’같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노력의 하나다. 이 외에도 국영방송을 중심으로 통합적 언어 사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수의 매체가 동참하고 있다.

## 8. 과제

### (1) 개인소득은 공공 정보인가

인구 1천만의 나라 스웨덴은 정보공개가 발달한 나라다. 개인의 소득과 납세 내역이 공개된다. 매 연말이면 스웨덴 대중지나 지역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올해

스웨덴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 “우리 동네 재산세 최고 납부자 30인”, “이 구역 최고의 부자는?” 등의 제목이다. 매체 성격에 따라 2018년 최고 소득자, 금융권 최고 소득자, 스포츠계 최고 소득자, 스톡홀름 최고 소득자부터, 지역지는 도시를 구단 위 동단위로 쪼개가며 그 구역 최고 소득자에 대한 기사를 낸다. 거대 기업의 대표가 얼마를 벌었는지야 별다른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우리 동네 누군가가 얼마나 벌었는지 실린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그 중 하나라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한스 스토올그렌(Hans Ståhlgren)은 사업가다. 스토올그렌은 2007년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동쪽 구 중 하나인 리딩외(Lidingö)에서 네 번째로 수익이 많은 사람으로 ‘아프톤블라데트’에 실렸다.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범죄자 하다못해 성범죄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매번 “스물세 살짜리”니 “스물네 살짜리”니 하면서. 나는 숨으려면 옷이라도 머리에 쓰고 다녀야 할 판이라고요. 왜 선량한 시민이 그 정도 존중도 못 받는 것인가요? 소득은 사적인 문제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해당자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나는 대중의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남의 재산이 무슨 뉴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sup>19)</sup> 소득이 공개된 이후 경호원을 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누가 얼마를 버는지는 도둑에게나 유용한 정보 아니냐는 사람도 있다.

## (2) 정보 공개 Vs. 개인정보

스웨덴은 정보공개가 매우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지는 나라다. 누구나 공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소득자가 아니어도 이웃의 누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면 누구나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소득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북쪽 인구 3,000명의 도시 아르예플로그(Arjeplog)의 지역지에 실린 “아르예플로그 10대 부자”에 오른 사람의 소득은 50만 크로나, 한화로 6,500만 원 정도다.

이것이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너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의 경우만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

---

19) Hans Ståhlgren in O'Mahony, P. (2009, 2, 6). Newspaper rich lists: public service or invasion of privacy?.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90206/17408>

냐는 주장도 있다. 스웨덴 언론노조 의장인 아그네타 린드블롬 홀텐(Agneta Lindblom Hulthén)은 개인 소득 공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문서 열람을 제한하려는 반복된 시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자 명단을 발표할 때 우리더러 고결한 윤리를 떠올리라고 하지만 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너무 적게 버는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풍토이다 보니 스웨덴에서 개인이 언론사를 재산 공개를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3) 2018 스웨덴 총선 가짜 뉴스 피해와 과제

스웨덴에서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서 2018년 9월 6일에 발표한 자료 ‘뉴스와 정치적 정보 소비 행태: 2018년 스웨덴 총선 트위터 지형도(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sup>20)</sup>에 따르면 2018년 9월 9일 치른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시민들이 유통한 선거 관련 트윗의 3분의 1, 즉 셋 중 하나가 가짜 뉴스라고 한다. 2018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간 275,000건의 트윗을 분석한 것으로 선거 직전 SNS에 선거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던 시점이다.

스웨덴의 가짜 뉴스 유통비율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가장 높으며, 최근 치른 선거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가짜 뉴스가 유통되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요 웹사이트로는 삼힐스뉴트(Samhällsnytt), 뉘헤테르 이닥(Nyheter Idag), 프리아 티데르(Fria Tider)가 있는데,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구 소속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의 85%가 이 세 사이트를 발원지로 삼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민자와 이슬람, 이슬람 혐오, 외국인 혐오에 대한 것이다<sup>21)</sup>.

---

20) ‘뉴스와 정치적 정보 소비 행태: 2018년 스웨덴 총선 트위터 지형도’ 보고서 다운로드:  
<http://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93/2018/09/Hedman-et-al-2018.pdf>  
21) Cuddy, A. (2018, 9, 6). 1 in 3 news articles shared about Sweden election are fake, finds study. <Euronews>. <https://www.euronews.com/2018/09/06/1-in-3-news-articles-shared-about-sweden-election-are-fake>

가짜 뉴스의 주요 내용은 양극화, 분열, 음모론이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극단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 오해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래에 가짜 뉴스로 구분하는 조건 다섯 가지<sup>22)</sup>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짜 뉴스로 본다.

- 전문성

전문적인 저널리즘 글쓰기의 기준이나 관행에 벗어났을 때. 정확한 정보(기자, 편집자, 발행인, 소유주)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정보에 대해 바로잡지 않는 등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 스타일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언어, 공격,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과장, 성급한 일반화, 인신공격성 글쓰기, 움직이는 이미지, 과도한 사진, 특정인의 표정으로 만든 이미지 등이 주를 이룰 때

- 신뢰성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전략적으로 퍼뜨릴 때.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제공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 편향성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이론적으로 편향된, 지극히 당파적인 뉴스로 정보보다는 강한 의견이나 논평이 중심을 이룬 경우

- 위조

폰트, 제목, 스타일 등 언론을 위조해 뉴스처럼 글을 쓰는 경우. 논평이나 가짜 정보를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 글 안에 정보원이나 뉴스 출처도 표기하되 취사선택해 왜곡하고 제목, 날짜, 지리 정보를 넣어 글쓰기의 톤이 기존의 뉴스인 것처럼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연구결과는 아직

---

22) Hedman, F & Sivnert, F. et al. (2018, Sep 6). News and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in Sweden: Mapping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on Twitter, *Oxford Internet Institute*, pp.2-3

없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중 하나인 리사 마리아 노이데르트(Lisa-Maria Neudert)에 따르면 스웨덴 총선을 비롯해 가짜 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2017년 미국 대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은 매우 적은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린 만큼 아주 적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사이트는 등록된 언론은 아니지만 유사 언론의 역할을 한다. 1인 미디어의 확산과 유명 인사의 SNS 내용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등록된 언론이 아니더라도 언론과 비슷한 역할과 영향력을 지닌 매체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거짓 정보와 혐오, 선동 등을 담고 있는 가짜 뉴스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다. 미디어 채널과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 IV. 핀란드의 언론 동향과 피해 구제 판례 연구

### 1. 핀란드 언론 관련 법과 규제

#### (1)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핀란드 헌법<sup>24)</sup>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 결사권과 함께 사회의 근간이 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다룬 핀란드 헌법 제2장 제6항부터 제23항 중 12개 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열람권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사전검열 없이 정보, 의견, 기타 의사소통을 표현, 배포, 수신할 수 있는 자유를 내포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아동 보호에 필요한 그림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제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

23) Cuddy, A. (2018, 9, 6). 1 in 3 news articles shared about Sweden election are fake, finds study. <Euronews>. <https://www.euronews.com/2018/09/06/1-in-3-news-articles-shared-about-sweden-election-are-fake>

24) 핀란드 헌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fi/laki/kaannokset/1999/en19990731.pdf>

상당한 이유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와 녹음물은 공공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개된 문서와 녹음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sup>25)</sup>

핀란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 정보열람권도 표현의 자유와 똑같이 중요히 여겨져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방해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없다. 다만 공개된 정보가 불법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소급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 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n.d.).

## (2)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sup>26)</sup>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고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모든 언론을 기술과 상관없이 규제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서 다루는 일부 규제로는 출판물에 대한 책임, 정보를 바로잡을 권리, 정보 출처의 익명성 보장 등이 있다(Ylönen & Nordenstreng, 2006).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의 일부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는 출판물의 책임 편집자를 지정해야 하고 출판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책임 편집자는 15세가 넘는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위법한 출판 정보에 대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개인이 출판물의 메시지로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는 동일한 출판물에 메시지에 대한 반론을 올릴 권리가 있다.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으며, 정정이나 반론은 무료로 지연 없이 게재되어야 한다. 또 책임 편집자는 필요시 반론이나 정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판사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25) ‘정부활동 공개에 관한 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9/en19990621.pdf>

26)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2003/en20030460.pdf>

### (3) 명예훼손·모욕 관련 법<sup>27)</sup>

형법 제24장 제9조 -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허위 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무시당하도록 했을 때, 또는 타인을 이미 언급한 방식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폄하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사자의 경우는 사자에 대한 허위 정보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공인을 적정선에서 비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일반적인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타인의 권리와 기타 상황을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형법 제24장 제10조 - 가중된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의해 상당한 고통 또는 특히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 가중되었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형법 제24장 제12조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중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임의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가 발생했고 특별히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이 기소를 명할 수 있다.

형법 제11장 제10조 - 민족적 선동: 공개적으로 인종, 피부색, 출생 상태, 국가 또는 민족 출신, 종교 또는 믿음, 성적 취향, 장애 등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을 위협, 명예훼손, 모욕하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 (4) 언론 관련 규제 당국

핀란드의 대중매체 시장에는 주로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면허는 정부가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 공영방송인 YLE는 예외적으로 방송 면허가 필요 없으며 자체 법에 의해 규제된다. 언론 시장은 외국인 소유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신문을 포함한 출판물과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면허, 허가,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부는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지만,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 활동은 통제하고 규제한다(Jyrkiainen, 2018).

---

27) 핀란드 '형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889/en18890039.pdf>

통신 정책과 입법은 교육문화부와 운송통신부에서 집행한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저작권위원회(Copyright Council)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저작권법<sup>28)</sup>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문화부를 지원한다. 운송통신부는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을 감독하는 FICORA(Finnish Communication Regulatory Authority)를 통해 전자통신, 운영권, 언론 보조금 시스템을 감독한다(ibid.).

핀란드에는 두 개의 데이터 보호 관련 기구가 있다. 법무부와 연계된 독립 기관인 데이터 보호 이사회(Data Protection Board)는 개인 정보 관련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관이다. 해당 주체의 필수적인 이익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는 개인 정보 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Data Protection Ombudsman)은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과 안내를 제공하고, 개인데이터법(Personal Data Act)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감독하며, 데이터 접근, 수정, 삭제의 권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ibid.; 3.3.2 사건 참조).

통신과 대중매체 관련해서는 총 25개의 법이 있는데, 헌법부터 통신시장법까지 다양한 규제와 권리조항을 포함한다. 이전의 언론자유법과 라디오방송책임법을 개정해 2004년에 발효된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법’은 출판과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된다. 이 법은 정기 출판과 프로그램 제작에 수많은 특별 요구 사항을 규정하지만, 개인 웹페이지는 범죄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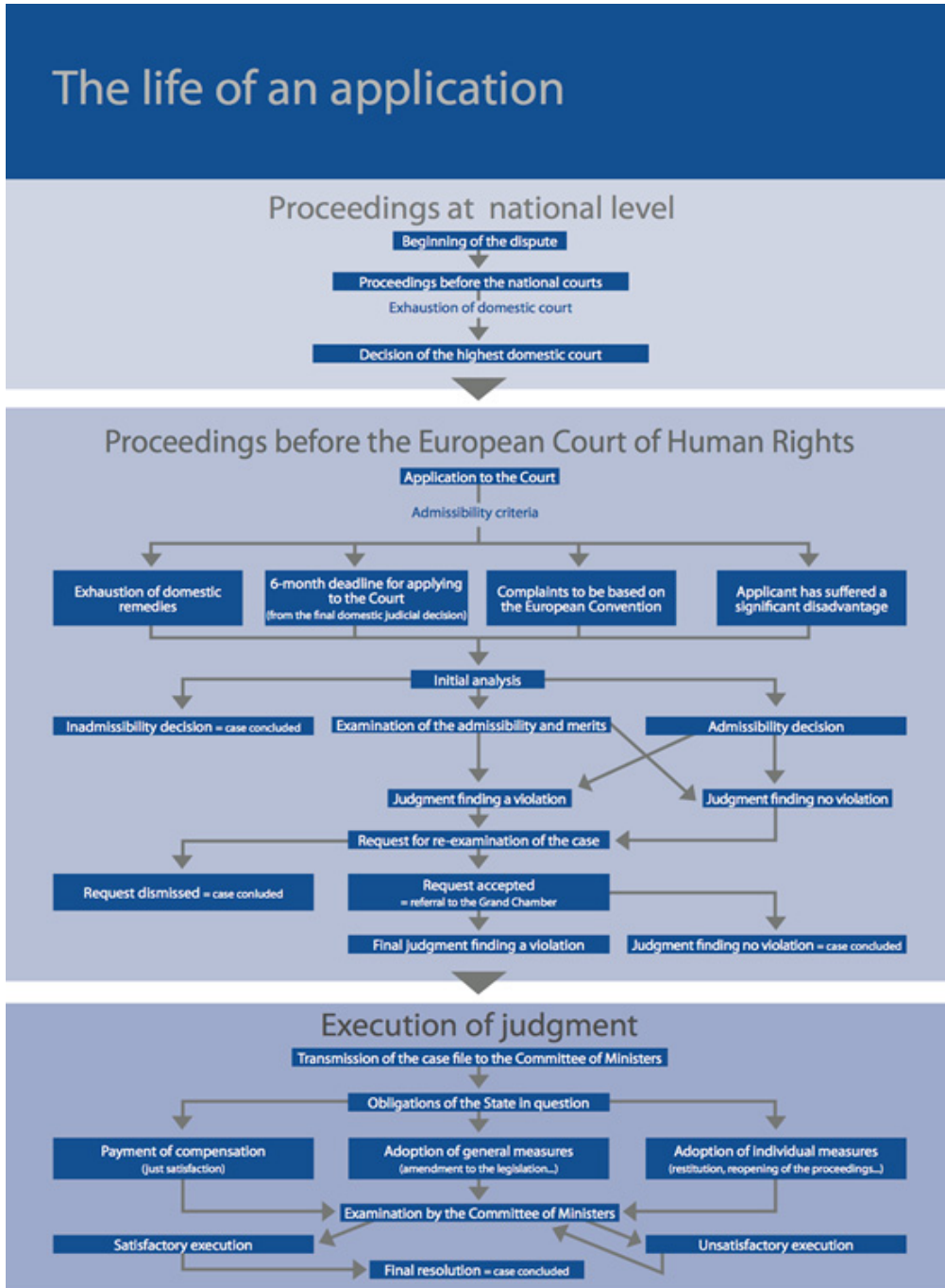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는 대중매체 콘텐츠를 자율규제하는 기관으로 출판사, 언론인, 해당 협회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유해 인터넷 콘텐츠를 감시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다(ibid.; 1.5 참조).

언론 관련 사건은 핀란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는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회원국은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종종 재판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이 국가의 결정이나 국내법을 기각할 권리는 없다(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n.d.).

---

28) 저작권법 비공식 영문 번역본: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1961/en19610404.pdf>

[그림 4] 유럽인권재판소 사건 처리 과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d.)  
The flow chart by © ECHR-CEDH



[www.echr.coe.int](http://www.echr.coe.int)

## (5)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 CMM)

### 1) 대중매체협의회(Council for Mass Media, 이하 CMM)

1968년에 설립된 자체 규제 기관인 CMM은 언론인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준수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현행 언론인을 위한 지침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웹사이트에 대한 불임을 추가했다. CMM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언론이 윤리를 위반했다고 느끼면 누구나 협의회에 이의를 제기<sup>29)</sup>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익명으로 제출된 항의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사항은 조사하지 않는다. 제기된 이의는 5개월 이내에 무료로 처리되며, 서명을 포함한 서면제출을 요하고 온라인 양식을 통한 접수가 가장 일반적이다(Council for Mass Media, 2008).

### 2) 언론인을 위한 지침

언론인을 위한 지침은 언론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직업윤리에 대한 담론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크게 언론인의 자격, 정보 취득과 공개, 인터뷰 진행자와 대상자의 권리, 정정과 반론권, 사생활과 공공성으로 나눌 수 있는 35개의 지침과 별도의 불임이 있다. 언론인을 위한 지침과 불임은 협회 회원과 기본 협약에 서명한 단체에 적용되며, 변경사항은 CMM 관리 그룹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Council for Mass Media, 2014).

불임은 언론인을 위한 지침과 중요성과 구속력 측면에서 동일하며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임은 언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관한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을 위한 지침이 6~13년 간격으로 개정되는 데 반해, 온라인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 잡기 위해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온라인에 관한 규정만 수정하기 위해 불임을 도입했다(ibid.).

정정과 반론권에 해당하는 20번째 지침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는 지체 없이 이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정정되어야 한다. 정정은 해당 매체 웹사이트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게시되었던 출판물에도 공개되어야 한다(ibid.; 3.1. 참조).

---

29) CMM에 접수된 불만에 대한 평결 결과 사례 참조:

<https://journalistiliitto.fi/en/council-for-mass-medias-first-verdicts-of-2016/>

## 2. 핀란드 언론의 현주소

### (1) 언론 지형과 디지털 환경

핀란드의 언론 환경은 강력한 지역 언론과 공영방송(YLE), 중요한 전국적인 일간지(Helsingin Sanomat, 이하 HS), 구독자가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두 개의 인기 석간 타블로이드(Ilta-Sanomat, Iltalehti)로 특징된다(Reunanen, 2018). 1990년대 후반 여러 번의 합병으로 인해 HS와 일파-싸노맷(Ilta-Sanomat)을 소유한 싸노마(Sanoma)와 아아무레흐띠(Aamulehti)와 일파레흐띠(Iltalehti)를 가진 알마 미디어(Alma Media)가 대부분의 신문 배포를 통제하고 있다(Freedom House, 2016). 중견 언론사들은 핀란드어의 특수성과 작은 시장 탓에 외국 언론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Reunanen, 2018).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환경의 활성화로 인쇄 매체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열독률이 시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시장 변화에 언론사들은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특히 석간 타블로이드와 YLE), 합리적인 온·오프라인 묶음 구독료, 사용자 데이터와 마케팅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색(자동차, 주택, 구인구직 온라인 마켓), 디지털 유료 기사 서비스 강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ibid.).

젊은 독자들이 디지털 서비스 구매에 익숙한 데다 유료화 벽(Paywall)을 강화한 덕에 2017년에는 디지털 유료 고객이 소폭 상승했으며, 유료 구독에 대한 의향 또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HS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구독자를 포함해 구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묶음 구독 시 저렴한 추가 비용도 다른 나라들보다 핀란드가 높은 온라인 뉴스 구매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언론은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부가세(24%)를 인쇄물 부가세(10%)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허용할 EU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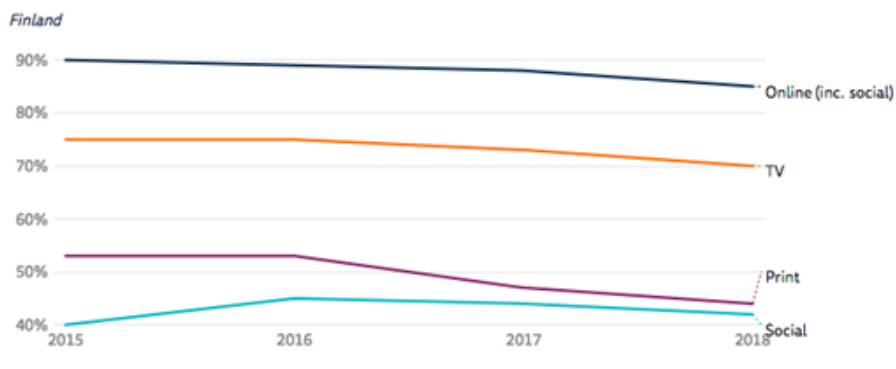
핀란드 언론 기관들은 구글의 디지털 뉴스 계획(Google's Digital News Initiative, DNI)으로부터 혁신적인 디지털 언론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49만 유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HS는 지원금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의한 최적의 기사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예정이다. DNI혁신기금은 현재까지 29개 유

럽연합 국가들의 45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9천만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다(Good News from Finland, 2017).

Digital News Report 2018에 따르면 주로 검색, 소셜 미디어 또는 뉴스 큐레이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핀란드(65%)와 노르웨이(62%)는 해당 언론 서비스에서 직접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주로 검색(47%)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30%)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ewman et al., 2018,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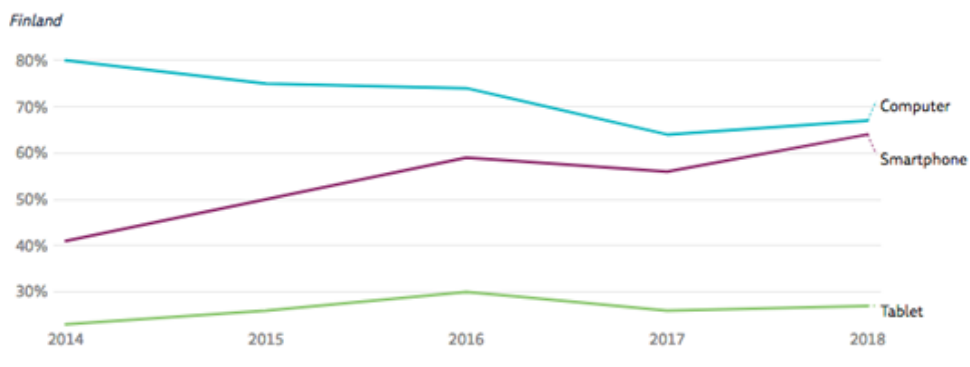
[그림 5] 핀란드 뉴스 매체 소비 트렌드 (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 SOURCES OF NEWS: 2015-2018



[그림 6] 핀란드 뉴스 소비를 위한 사용 기기 트렌드 (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 DEVICES FOR NEWS: 2014-2018



## (2)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2년 연속 하락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핀란드는 5년 연속 1위(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 보고서는 2011년과 2012년 통합 보고서)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게 밀려 3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에게 3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씨피래게이트(Sipilägate)’ 추문이 핀란드의 2017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총리 유하 씨피래(Juha Sipilä)가 YLE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보도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YLE는 두 기자와 편집장 간의 내부 논쟁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후에 관련자 모두 사임했다.<sup>30)</sup> 2017년 12월에는 핀란드 정보기관의 러시아 감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HS 기자의 집이 수색당했다.<sup>31)</sup> 법원은 수색이 합법이라 보았고 기자와 그녀의 동료가 군사 기밀을 공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듯 언론에 대한 잇따른 추문이 핀란드의 2018년 순위를 결정짓게 한 주요한 요소이다(ibid.).

## (3) 가짜 언론과 혐오 발언(Hate Speech)

### 1) 가짜 언론

2016년 3월 1일, 핀란드 주요 언론 매체의 편집장 21명은 가짜 언론에 대한 공동 성명서<sup>32)</sup>,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비판한 가짜 언론은 엠베-레흐띠(MV-Lehti)를 비롯한 몇몇의 신생 온라인 언론으로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주요 언론 매체의 대안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 가짜 언론들은 주요 언론 매체들이 친정부적인 자세로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편파 보도를 통해 그들

---

30) Yle Uutiset (2017, 5, 29). Editor-in-chief Atte Jääskeläinen departs Finnish public broadcaster.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editor-in-chief\\_atte\\_jaaskelainen\\_departs\\_finnish\\_public\\_broadcaster/9637595](https://yle.fi/uutiset/osasto/news/editor-in-chief_atte_jaaskelainen_departs_finnish_public_broadcaster/9637595)

31) Yle Uutiset (2017, 12, 18). Monday's papers: Intelligence documents leak, heavy concert accident, the job's in your genes.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mondays\\_papers\\_intelligence\\_documents\\_leak\\_heavy\\_concert\\_accident\\_the\\_jobs\\_in\\_your\\_genes/9981816](https://yle.fi/uutiset/osasto/news/mondays_papers_intelligence_documents_leak_heavy_concert_accident_the_jobs_in_your_genes/9981816)

32) 가짜 언론에 대한 공동 성명서 전문: <https://yle.fi/uutiset/3-8709207>

이 초래할 잠재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극우파의 주장과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매체로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European Centre for Press and Media Freedom, 2016).

보통의 뉴스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이들 가짜 언론은 주류 매체에 대한 비판과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점철되어 있는데, 일부 뉴스는 기사와 상관없이 피부색이 짙은 사람의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이들 매체는 독자에게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명서는 다원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아무 말이나 퍼뜨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며, 새로운 언론이 언론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ibid.).

공동 대응은 가짜 언론이 거짓말쟁이, 광대, 악마, 선동 기계 등으로 묘사하며 공격하고 있는 기자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기자들은 가짜 언론의 공격에 영향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이라 발표했고,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시민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편집장들은 서로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직업윤리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가짜 언론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반증이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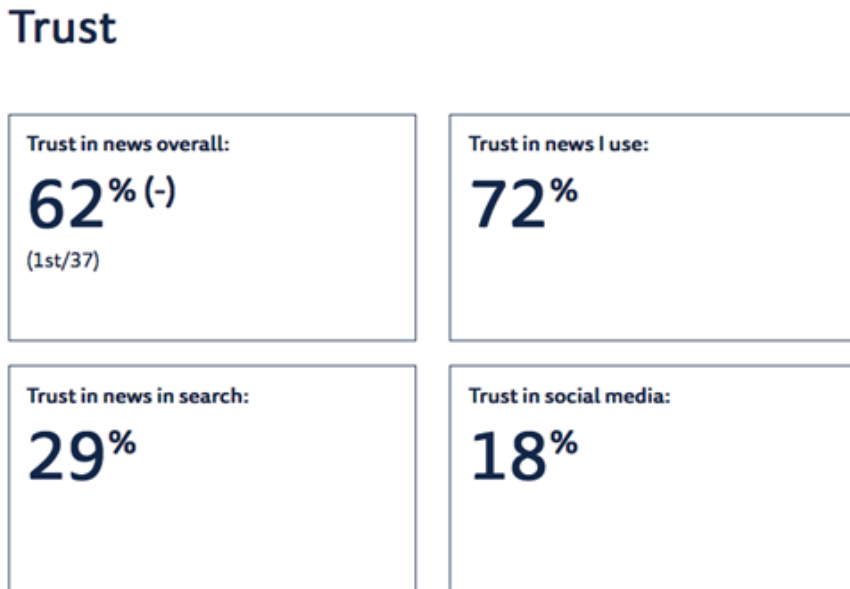
반이민 정서와 기존 매체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내용을 제공하는 엠베-레흐띠(MV-Lehti)는 핀란드의 가장 인기 있는 선동 사이트다. 엠베-레흐띠는 민족 선동 및 기타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로 2018년 초에 엠베-미디어(MV-media)로 명칭과 경영진을 변경하였다(Reunanen, 2018).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썰(Uber Uutiset, 엠베-레흐띠와 비슷한 반이민 선동 사이트)의 설립자인 일야 야닐스킨(Ilja Janitskin)은 2018년 10월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16개의 범죄 혐의로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Yle Uutiset, 2018g).

2016년 1월에는 9개의 정치적인 청소년, 학생 단체들이 모여 기업들에게 가짜 매체인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썰에 광고를 통한 금전적 지원을 거부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활동으로 가짜 언론 웹사이트가 인종차별적이고 개인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댓글을 허용해서 이를 장려한 것은 아닌지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Yle Uutiset, 2016). 댓글 관련 조사 촉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진다. 온라인 출판물의

독자 논평 부분이 뉴스와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해당 사이트에 책임이 없지만, 일반적인 댓글에 대한 책임은 편집장에게 있다. 책임 소재 판단에서 사이트가 댓글을 미리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주로 상업적 용도의 큰 웹사이트에만 해당된다 (Uusi Suomi, 2015).

대안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뉴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은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핀란드 사회와 언론의 낮은 양극화 수준과, 객관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언론인들의 강한 직업 문화가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고 있다(Reunanen, 2018).

[그림 7] 핀란드 대중의 뉴스에 대한 신뢰(Reunanen, 2018)  
The chart by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under CC BY 3.0



## 2) 온라인 괴롭힘, 혐오 발언

이민, 망명, 러시아의 개입과 관련된 기사들이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가장 많이 부추겼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00명의 응답자 중 6분의 1이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40%는 위협이 이민과 망명에 대한 기사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6년에 망명 신청자들의 핀란드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과 망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괴롭힘도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짜 뉴스 웹사이트인 엠베-레흐띠가 중심에 있었으며, 일부는 극우 정치인의 지지가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괴롭힘이 일반화되고 있다(Onali, 2018).

혐오 발언은 직업상 비판으로 이해하기엔 사생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자들은 개인을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독자와 가까워졌다. 그 결과 더 많은 공인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직업적 역할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사생활 공격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ibid.).

온라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대응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언론사일수록 대응이 빨랐으며, 규모가 있는 언론사일수록 위협에 대한 정보가 주변 동료 사이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기자들에 따르면 동료들의 지지와 대화가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사회정신적 지원이다. 회사의 공개적 지원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자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어 괴롭힘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편집자나 발행인이 공개적으로 지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언론사 측의 기자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기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ibid.).

기자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경찰은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을 구분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경찰은 혐오 발언을 직업에 따른 비판으로 여겨 대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스스로가 혐오 발언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설령 경찰이 혐오 발언에 대해 적극 대응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법의 적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ibid.).

온라인 폭력, 위협, 공격적인 반응들은 기자들의 직업관을 변화시켰다. 기자들은 자기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기사 제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기사를 바라봄으로써 해석의 여지나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엄청난 비판을 초래해서 일이 느려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기사에 댓글 문제로 이민이나 인종범죄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을 피하게 된다는 기자들도 있다. 온라인 괴롭힘은 기자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학자나 일반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이 기사에 언급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열린 사회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ibid.).

조사에 따르면 남녀 기자에 대한 위협의 수는 비슷하지만, 여기자가 유독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의 지원이 부족한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온라인 괴롭힘에 홀로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쳐 일이 줄어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bid.). 언론에 보도되는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 사례는 대체로 여기자를 향한 혐오 발언 사건들이다.

### 3) 혐오 발언에 대한 언론사와 정부의 대응

언론사 자체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이 괴롭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언론사마다 댓글 인증의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 한 언론사는 현재 본인 인증 없이 댓글을 달 수 있지만, 본인 인증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계획이다. 언론사들은 혐오 발언 예방 차원에서 언론사 웹사이트 댓글에 대한 운영자 사전 검토를 하는데, 작은 언론사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토론이 오가는 페이스북의 경우는 언론사의 중재가 매우 어렵다. 언론사는 중재 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중재에 의한 댓글 차단이 다른 플랫폼에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언론사의 주의가 요구된다(Onali, 2018).

YLE는 대부분의 핀란드 언론사와는 달리 새로운 온라인 토론 문화를 이끌고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문 직원을 두어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청중들과 소통하고 있다<sup>33)</sup>. 이로써 온라인 혐오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건강한 토론 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화를 통해 청중은 언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언론의 역할과 접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언론은 청중의 언론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게 된다(ibid.).

핀란드 혁신기금 씨프라(Sitra)에서 진행하는 ‘중간 휴식’이라는 뜻의 ‘에래따우꼬(Erätauko) 프로젝트’는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의 대중적 담론을 보다 건설적이고 덜 공격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대화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툴박스<sup>34)</sup>를 만들었으며, HS를 포함한 언론과 정부

33)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진행한 YLE 청중 대화 책임자와의 인터뷰:

<https://ipi.media/at-finlands-yle-helping-audiences-see-journalisms-role/>

34) 에래따우꼬 대화 도구를 참조: <https://www.sitra.fi/en/timeout/#dialogue-tools>

기구 등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Personal communication with Kareinen, J. Specialist, Erätauko, Sitra. 2018, 6, 6). 이 실험에서 HS는 특수교육이나 이민자 통합 같은 주제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논쟁이 아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규칙 아래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 토론을 중재자가 이끌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Onali, 2018).

#### 4) 혐오 발언하는 정치인들

핀란드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치인들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인터넷 활동을 1인 미디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넷 활동이 종종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독 극우파 정당인 핀란드인당(Finns party) 소속 정치인들이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핀란드 주류 언론은 기사에서 정치인을 언급할 때 과거 그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함께 정치인을 소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한 정치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는 정치인이 과오를 돌아보게 하고, 당사자는 물론 다른 정치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30일, 학생들의 이름이 포함된 포스터 과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학교가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했던 핀란드인당 국회의원 라우라 후따싸아리(Laura Huhtasaari)를 다룬 기사는 그녀를 “최근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그녀를 이민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게시글은 핀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진을 공개해 미성년 학생들을 온라인 학대와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이메일과 전화 위협이 도가 지나쳐 경비를 고용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후따싸아리를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Yle Uutiset, 2018e; Yle Uutiset, 2018f).

한편 2012년 6월 대법원은 핀란드인당 국회의원 유씨 할라-아호(Jussi Halla-aho)가 2008년에 올린 이슬람교를 소아성애와 비교하고,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훔치거나 복지 혜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한 블로그 글에 대해 민

족 그룹에 대한 혐오 선동과 종교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명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혐오 발언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Yle Uutiset, 2012). 같은 당 오울우 시의원인 쎄바쓰피안 뎡퀴넨(Sebastian Tynkkynen)<sup>35</sup>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015년 당시 핀란드인당 정치인이었던 올리 싸데미에쓰(Olli Sademies)는 페이스북에 아프리카계 남성의 강제 중성화를 주장하는 혐오 발언 글을 올려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핀란드인당에서 제명되었고 그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Yle Uutiset, 2018b). 핀란드인당에서 제명된 정치인 테르히 끼에문끼(Terhi Kiemunki)<sup>36</sup>와 핀란드인당 소속 국회의원 테우보 하카라이넨(Teuvo Hakkarainen)<sup>37</sup>도 민족 집단에 대한 선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3. 핀란드 언론 피해 사례

#### (1) 오보와 정정보도 사례: 뚜르꾸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

핀란드 타블로이드 신문 일따레흐띠(Iltalehti)는 2017년 8월 18일 저녁에 발생한 뚜르꾸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에 대해 제보 받은 비디오를 신문사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디오 제목에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여러 명의 칼을 든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기사<sup>38</sup>는 18일 17시 18분에 보도되었으며, 같은 날 20시 10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내무부 장관에 의해 칼을 든 사람은 한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따레흐

---

35) Teivainen, A. (2017, 12, 14). Tynkkynen denied leave to appeal against ethnic agitation sentence. <Helsinki Times>. <http://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domestic/15199-tynkkynen-denied-leave-to-appeal-against-ethnic-agitation-sentence.html>

36) Yle Uutiset (2018, 7, 11). Finns Party politician denied leave to appeal ethnic agitation conviction.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politician\\_denied\\_leave\\_to\\_appeal\\_ethnic\\_agitation\\_conviction/10299153](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politician_denied_leave_to_appeal_ethnic_agitation_conviction/10299153)

37) Yle Uutiset (2017, 1, 4). Three Finns Party politicians in court over online hate speech. <Yle Uutiset> [https://yle.fi/uutiset/osasto/news/three\\_finns\\_party\\_politicians\\_in\\_court\\_over\\_online\\_hate\\_speech/9388039](https://yle.fi/uutiset/osasto/news/three_finns_party_politicians_in_court_over_online_hate_speech/9388039)

38) Iltalehti (2017, 8, 18). Lukijan video turkulaisen kerrostalon ikkunasta: Ihmiset juoksivat kadulla puukotuksen jälkeen. <Iltalehti>. <https://www.iltalehti.fi/iltvuutiset/201708180171813>

떠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공고<sup>39)</sup>를 다음날인 19일 12시 54분에 웹사이트에 올렸고, 해당 기사의 내용도 정정하였다.

## (2) 명예훼손 사례

### 1) 요한나 베흐꼬오(Johanna Vehkoo)

2018년 10월에 오울우 시의회 의원 유네스 로까(Junes Lokka)가 언론인 요한나 베흐꼬오(Johanna Vehkoo)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베흐꼬오가 로까를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나치라고 묘사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올가을 초로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베흐꼬오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으며, 그의 Youtube 채널에서도 베흐꼬오에 대한 비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b).

참고로 2017년 겨울 검찰은 경찰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내의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에 대해 공개적인 열람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기소를 하지 않은 바 있다. 문제의 경찰 페이스북 그룹에는 2800명의 회원이 있었다. 현재 베흐꼬오는 비공개 페이스북에 게시된 발언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녀의 게시물은 300명 미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 불기소와 비교되어 귀추가 주목된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b).

### 2) 니씨까싸아리(Nisikasaari) 사건

니씨까싸아리는 오타바메디아(Otavamedia)가 발행하는 주요 주간지에서 일하는 기자다. 2002년 5월 발행된 기사에서 니씨까싸아리는 1998년 3월과 2001년 11월에 방영된 고평이로 오염된 집과 삼림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룬 두 편의 TV 다큐멘터리를 비판했다. 그는 기사에서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일부 수치가 조작되었으며, 취재 기자들 중 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한 연구자의 증언을 다큐멘터리에 넣었다고 주장

---

39) Iltalehti (2017, 8, 19). Oikaisu Iltalehden julkaiseman videon otsikosta. <Iltalehti>. <https://www.iltalehti.fi/kotimaa/201708192200337181>

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5).

해당 기자는 니씨까싸아리와 오파바메디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했다. 2007년 1월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2009년 1월 고등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24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니씨까싸아리에게는 기자의 손해에 대해 2,000유로를, 오파바메디아에게는 해당 기자의 손해 금액과 비용 및 경비에 대해 4,000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9년 12월에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ibid.).

니씨까싸아리와 오파바메디아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이 유럽인권협약 제 10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고, 특히 그와 회사에 대한 제재가 불균형적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 절차 기간으로 인해 제6조 제1항(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재판소는 제6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10조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핀란드로 하여금 니씨까싸아리와 회사에게 31,942.29유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에게 1,500유로, 비용과 경비 측면에서는 양측에게 3,000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ibid.).

### 3) 리쓰따매끼(Ristamäki)와 꼬르보라(Korvola) 사건

방송사 편집자 리쓰따매끼와 그의 상관인 꼬르보라는 2006년 2월 27일 국영방송 채널에서 당국 간의 협력 부족을 비판하면서 스포츠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국가수사국이 요청한 세무감사를 세무당국이 거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찰이 그 당시 경제사범으로 재판 중이었던 유명한 사업가 K.U.의 돈이 스포츠센터 구매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프로그램은 새로 방송되면서 스포츠센터에 쓰인 돈이 사실 K.U.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는 K.U.의 동업자의 설명을 추가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a).

2007년 12월 10일 검찰은 두 사람에게 대해 리쓰따매끼가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꼬르보라가 방송을 승인함으로써 둘이 협조해서 고의로 K.U.에 대해 오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고통과 경멸을 유발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꼬르보라와 같이 두 번

재 방송을 허락한 해당 방송사의 편집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해당 내용이 퍼져 K.U.에게 큰 고통이 야기되었다며, 피고인들에게 가중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K.U.는 해당 재판에서 정신적 피해와 법적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방송이 세무당국과 경찰의 협력 문제를 다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ibid.).

2008년 5월 9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진실만을 보도했지만, K.U.가 스포츠센터에 투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편집자들이 해당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중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K.U.가 이미 비슷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암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는 K.U.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두 사람과 편집장은 K.U.의 피해와 법적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받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기 이 사건의 상소를 기각했다(ibid.).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는 이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10조(표현의 자유)와 제41조(Just Satisfaction)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2013년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핀란드 정부에게 리쓰따매끼와 꼬르보라가 지불한 비용과 경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ibid.).

#### 4) 싸루매끼(Salumäki) 사건

2004년 7월 8일 일타-싸노맷(Ilta-Sanomat)의 기자 띠이나 요한나 싸루매끼(Tiina Johanna Salumäki)가 한 살인 사건 수사에 관한 기사를 썼다. 신문 첫 면에 핀란드의 유명한 사업가 K.U.와 희생자의 관계 여부를 묻는 제목과 함께 K.U.의 사진이 실렸다. 기사 옆에는 K.U.의 이전 경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한 별도의 칼럼이 있었다. 2006년 8월 25일 헬싱키 지방법원은 비록 해당 기사의 본문에서 K.U.가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기사의 제목이 K.U.가 살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며, 싸루매끼와 당시 신문 편집장 H.S.가 K.U.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싸루매끼에게 편집장과 공동으로 K.U.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싸루매끼는 정부와 K.U. 양측 다 명예훼손 소송 도중에 한 번도 기사의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10조(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제소하였지만 2014년에 기각되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b).

### (3) 사생활 침해 판례

#### 1) 잊힐 권리: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는 판례

2018년 핀란드 대법원은 구글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남자의 범죄 정보(살인)를 검색 엔진 데이터에서 지우라고 요청했다. 이는 핀란드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이며, 2014년 5월에 도입된 EU의 '잊힐 권리에 대한 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법은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또는 누락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Yle Uutiset, 2018d).

해당 사건은 핀란드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의 삭제 요청을 구글에서 거부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잊힐 권리를 요구한 남자는 정신적 문제로 '한정 책임 살인'으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살인은 2012년에 발생했고 남자는 2017년 7월에 석방되었다. 법원은 해당 범죄는 심각하지만 건강 문제로 살인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만을 진 사실은 민감한 정보로, 개인 사생활 존중이 대중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ibid.).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남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구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인으로 봐야 하므로 데이터 삭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ibid.).

#### 2) 싸파꾼난 마르끼나뵈르씨(Satakunnan Markkinapörssi)와 싸파메디아(Satamedia) 사건

싸파꾼나 마르끼나뵈르씨와 싸파메디아는 세금 정보를 보도하는 베로뵈르씨(Veropörssi) 신문을 발행했다. 2003년, 싸파메디아는 2002년에 베로뵈르씨에 실린 120만 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세금정보를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 4월, 데이터 보호 옴부즈맨은 두 회사의 과세 데이터 처리와 범위에 대해 행정 질

차를 요청했으나,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해당 회사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의 부분적 침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

2009년 4월, 법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는 언론 활동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로, 두 회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데이터보호이사의 결정을 각하하고 데이터보호이사회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데이터 보호 이사회가 언론사가 세금 정보를 2002년처럼 공개하는 것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12년 6월에는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했다(ibid.).

두 회사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4조(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유럽인권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제6조 제1항(합리적 시간 안에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에 기대어 절차상 기간이 과도한 데 대해서도 제소하였다. 2015년 7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6대 1로 유럽협약 제10조를 위반한 점은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만장일치로 절차 기간에 대해 제6조 제1항을 위반했지만, 제14조에 의거한 불만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ibid.).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세금 정보이지만 언론사의 대대적인 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로 결론이 난 것이다.

#### (4) 가짜 언론에 의한 혐오 발언 사례

##### 1) 예씨까 아로(Jessikka Aro)와 가짜 언론(러시아 트롤)

공영방송 YLE 기자인 아로는 2014년 9월 YLE 뉴스 사이트에 러시아 트롤이 이용하는 전술과 웹사이트, 그들의 허위 정보 공격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트롤은 나토에 협력하는 스파이인 아로가 핀란드에 사는 러시아인들을 박해하고, 불법적인 친푸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 사이트에 퍼뜨렸다. 또한 아로의 정신 건강과 러시아 트롤 취재에 의문을 제기했고, 아로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해 그녀를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에 노출시켰다<sup>40)</sup>. 2016년 2월에는 아로의 12년 전 약물 남용에 대한 벌금 판결 전력을 공개했고, 아로를 약에 취해 기사를 쓰는 정신질환자 마약상이라는 허위 기사를 가짜 언론<sup>41)</sup>과 극우 음모론 사이트

40) 아로를 나토 트롤로 포함하는 뮤직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igOa1EXKzTI>

41) 아로를 마약상으로 묘사한 MV-lehti 가짜 기사:

<https://mvlehti.net/2016/02/24/natos-information-expert-jessikka-aro-turned-out-to-be>

에 게재했다(Aro, 2016).

아로는 온라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트롤 공장 잠입 취재<sup>42)</sup>를 하였고, 독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트롤이 활동하는 온라인 포럼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공격적인 친러시아 선동이 다수의 핀란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러시아 정치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멈추거나, 러시아 관련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에 동요한 사람들은 심지어 YLE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아로는 이 취재로 2016년에 핀란드 본니에르 언론상(Bonnier Journalism Prize)을 받았다(ibid.).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썰의 설립자인 일야 야니쓰킨(Ilja Janitskin)은 2018년 10월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16개의 범죄 혐의<sup>43)</sup>로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다른 두 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13만6천 유로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그는 아로에게 개인적으로는 3만5천 유로를, 백크만(Bäckman)과 함께로는 1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백크만은 아로를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모욕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백크만은 아로가 마약중독자였고, 러시아 정부의 적이자 스파이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야니쓰킨에게 아로에 대한 기만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부추긴 바 있다(Yle Uutiset, 2018g).

야니쓰킨의 가중된 명예훼손은 아로, 반이민자 뉴스 사이트 광고주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을 주도한 학생 운동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사람 등 세 명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가중된 민족 선동은 이슬람교와 유대인에 관한 것이었으며 HS와 한 언론사의 자료를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저작권 위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야니쓰킨은 엠베-레흐띠와 우베르 우우띠썰 사이트를 차단을 위한 헬싱키 경찰 수사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밀유지 위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 게임을 판매하고, 허가 없이 기금 모금을 한 그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ibid.).

---

-a-convicted-drug-dealer/

42) 아로의 러시아 트롤 공장 잠입 취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59Zfcne48>

43) 가중된 명예훼손 3건, 가중된 민족 선동 2건, 저작권 침해 3건, 기밀유지 위반 2건, 불법 도박 혐의 2건, 불법 기금 모금 혐의 4건

## 2) 린다 뿔코넨(Linda Pelkonen)

린다 뿔코넨은 2015년에 온라인 뉴스 사이트 우씨 수오미(Uusi Suomi)에 올라온 기사에서 14살 소녀 강간 사건 용의자에 대해 평소와 달리 경찰이 이민자 출신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빌미로 엠베-레흐띠가 그녀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주도해 강간과 살인 협박을 받게 했다. 뿔코넨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역 검사가 언론인의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판을 견뎌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뿔코넨은 핀란드 언론인 노조와 함께 온라인 위협 조사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7). 결국 2018년 초 뿔코넨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 받은 3명 중 2명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는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위협에 대한 핀란드 법정의 첫 번째 유죄 판결로 예씨가 아로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되었다(Onali, 2018).

## 3) 레벡카 해르피넨(Rebekka Härkönen)

투룬 싸노맛(Turun Sanomat)의 기자 해르피넨은 2017년 8월 사망자 2명, 부상자 8명을 낸 투르쿠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3.1과 같은 사건)에서 부상자 한 명을 돕고 범인을 추격했던 망명 신청자인 18세 아프간 청년 아흐마드 호세이니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 기사는 당시 도움을 주었던 핀란드인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호세이니의 행동을 강조하며, 이슬람 국가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지적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핀란드인당 대표 유씨 할라-아호(2.3.4 참조)가 해당 기사가 날조라는 엠베-레흐띠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그녀에 대한 온라인 학대를 야기했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해르피넨은 살인 위협을 포함한 수많은 협박을 받았고, 공공장소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했다. 그녀는 결국 회사의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위협을 견디다 못해 헬싱키의 자매회사로 이직했다(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8; Yle Uutiset, 2018a).

위협이 심각해지면서 해르피넨은 증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를 철회했지만, 공

익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사건이 기소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검찰 총장은 이 사건이 공익과 무관하다 판단하여 기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법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a).

#### (5) 학교 총격 사고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 Jokela vs. Kauhajoki

2007년 11월 7일 핀란드 남부, 헬싱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투우수라(Tuusula) 지역의 요켈라(Jokela) 마을에서 18세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6명의 학생, 교장 선생님, 학교 간호사가 사망했다. 범인은 학교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결국 자신에게 총을 쏘서 치명상으로 그날 저녁 사망했다. 또 2008년 9월 23일 헬싱키에서 300km 떨어진 도시, 까우하요끼(Kauhajoki)에서 22세 응용과학대학교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여, 9명의 동급생과 시험 감독 선생님을 총으로 쏘 죽였다. 범인은 학교 건물에 여러 번 불을 질렀으며, 자신에게도 총을 쏘서 치명상으로 나중에 사망했다. 두 건의 총기 폭력 사건이 1년 사이에 연이어 발생했지만, 총기 폭력 사건은 핀란드 학교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전 사건으로는 1989년 핀란드 서쪽 라우마(Rauma)에서 14살 소년이 두 명의 동급생을 쏜 사건이 유일하다(Raittila, Koljonen & Väliverronen, 2010).

두 범인의 상황과 범행 방식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을 존경했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전 범행 예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 가지 큰 차이는 까우하요끼 범인이 올린 영상에 대해 범행 하루 전날 경찰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경찰의 의문 제기는 총기 허가를 철회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구두 경고로 그쳤다. 그러나 두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는 상당히 달랐다. 언론이 요켈라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에 중점을 두어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에게 무리하게 접근해서 큰 비판을 받은 반면, 까우하요끼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대중의 비판을 피했다(ibid.).

요켈라 사건은 핀란드에서 인터넷이 주요한 정보 출처가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대중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고, 언론인들도 인터넷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보도에 대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속보에만 신경을 썼고, 경험이 적은 기

자가 현장에 파견돼, 편집장이 상황을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부 언론은 독자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도하였다. 일부 기자들은 전화 소리 때문에 위치가 알려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성인 희생자들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Jokela School Shooting, 2009).

2007년 11월 21일 요켈라의 청소년들은 총리와 4명의 장관들에게 요켈라 총격 사건의 언론 보도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위기 센터 앞 카메라를 이용한 스토킹과 무리한 인터뷰 시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삶을 파헤쳐 비극적인 삶을 그리려 한 시도, 몰래 찍은 사진의 무단 게재, 취재 명목의 무단 주거침입, 토론 도청, 허락 없이 추도식에 난입해 카메라를 들이댄 행동 등의 언론의 부당한 행위가 그들의 슬픔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청원은 정치적인 대응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주의를 끌었다(ibid.).

대중매체협의회(CMM)는 요켈라 사건 관련 4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2건은 범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비디오 장면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로 결론이 내려졌다. 세 번째 불만은 가해자 부모에 대한 개인 정보 노출로, 실명을 배제한 보도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지막 불만은 4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럼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쓰인 잡지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범인의 아버지였는데, 저자가 자신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은 민감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잡지가 출처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받았다(ibid.).

CMM은 요켈라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청원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이 직접 불만을 제기하도록 권유했다. 청소년들은 이미 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지쳐 불만 제기를 포기했다. CMM은 언론 발표를 통해 요켈라 희생자와 목격자가 상당수 미성년자였기에 언론이 더 조심했어야 했으며,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은 어려우며, 그들에게 인터뷰를 부추기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견해를 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여론에 공개되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ibid.).

사건 당시 언론은 보도할 공식 정보가 없어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요켈라 사건 후 대부분의 언론은 사건을 분석했고, 위기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과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관한 수많은 지역 패널 토론을 열었으며, 주요 주제는 편집자와 기자의 역할뿐 아니라 누가 무엇을 결정할지를 포함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닛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 Trauma)에서 만든 언론인, 편집자, 관리자를 위한 웹가이드 '트라우마와 저널리즘(Trauma and Journalism)'<sup>44)</sup>이 요켈라 사건 이후 핀란드어로 번역되었다(ibid.).

까우하요끼 사건에서 언론은 요켈라 사건의 비판을 감안하여 한 발 물러서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였다. 헬싱키와 가까웠던 요켈라는 당국, 의료진, 위기관리 노동자들이 현장 대처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자들이 도착한 반면, 까우하요끼는 헬싱키와 상대적으로 떨어져 당국이 현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까우하요끼까지 오는 동안 기자들도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다(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Kauhajoki School Shooting, 2010).

언론은 사건과 연루된 사람 중 학교 관리인과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응용과학대학은 각지에서 몰려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주민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당국이 제공한 공식 정보에 의지하게 되었다. 언론은 현장과 거리를 두고 취재했으며, 요켈라 사건의 비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요켈라 사건과 비교해서 범인에 대한 보도의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범인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면서 범인을 영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대해 CMM에 불만이 한 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ibid.).

---

44) Dart Center (2009). Trauma & Journalism.

[https://dartcenter.org/sites/default/files/DCE\\_JournoTraumaHandbook.pdf](https://dartcenter.org/sites/default/files/DCE_JournoTraumaHandbook.pdf)

#### 4. 결론: 핀란드 언론의 자부심

보고서를 쓰면서 주변 핀란드인들에게 가볍게 언론분쟁에 대해 떠오르는 사례를 물었지만, 아무도 쉽게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언론분쟁이 매우 드문 일이라 질문이 매우 낯설게 느껴진 듯하다. HS의 한 기자에게 뚜르쿠 테러리스트 칼부림 사건 오보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를 하자, 속보 상황에서 발생한 한 언론사의 실수로 금방 정정보도가 났다는 답변과 함께 당시 다른 언론사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HS는 오보가 매우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금방 정정된다면서, 자찬이 아닌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목격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기자에게서는 언론의 가짜 뉴스 보도는 거의 없으며, 언론분쟁은 주로 정치인과 사생활 문제에 관련되어 있지만 딱히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언론의 자율규제기관인 대중매체협의회(CMM) 회장은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가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짜 뉴스 대처를 선도하는 국가로 꼽혔으며,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자율적이며, 언론은 거의 고소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속적인 정부의 언론 압박 추문으로 다년간 1위를 차지해왔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핀란드의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밀려났지만, 관련 언론 압박 사례에 대해 당당히 보도할 수 있는 현실은 국제 언론 연구기관들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등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한 핀란드의 언론 현실을 다룬 보고서들이 이 보고서 작성의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어느 한 기자는 ‘핀란드: 언론인들의 유토피아(Finland — a utopia for journalists)’<sup>45)</sup>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HS는 2018년 7월,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의미로 두 정상이 공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까지 오는 길에 볼 수 있도록 300여 개의 광고판에 두 정상과 그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뉴스의 제목으로 만

---

45) Finland — a utopia for journalists: <http://www.media.ba/en/magazin/finland-utopia-journalists>

든 포스터<sup>46)</sup>를 붙였다. HS는 이를 통해 두 정상과 전 세계에 민주시민사회의 초석으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물론, 힘든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동료 언론인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이로써 HS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 언론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언론의 자유를 거침없이 침해하는 두 정상에게 진정한 언론다운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핀란드 언론인들의 자부심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중의 언론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망명 신청자들의 급작스러운 증가에 따른 가짜 뉴스 사이트의 범람을 막아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가짜 언론 사이트에 대한 대응으로 서로 경쟁하던 언론사들이 힘을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성명서를 낸 것도 가짜 언론이 흠집 내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또한 오보와 소셜미디어의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한 러시아의 정보전쟁 공격에서 핀란드가 선전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율과 신뢰로 설명 가능한 핀란드 언론의 저력은 한국의 언론계가 참고할 지점이라 할 것이다.

---

46) “HS: The Land of Free Press 2018” Youtube 영상: [https://youtu.be/cTfon2qTM\\_Y](https://youtu.be/cTfon2qTM_Y)

- Goldberg, D. (2017). Who Was Peter Forsskål?. In: Carlsson, U. & Goldberg, D. (eds.) *The Legacy of Peter Forsskål - 250 Years of Freedom of Expression*. Sweden, Nordicom, 13-25. Available from: <http://www.nordicom.gu.se/en/publikationer/legacy-peter-forsskal>
- Helsingin Sanomat Foundation & Anders Chydenius Foundation (n.d.). *Press Freedom 250 years*. Available from: <http://www.painovapaus250.fi/en/press-freedom-250-years>
- Nordenstreng, K. (2017). Freedom of Speech in Finland 1766-2016 - A Byproduct of Political Struggles. In: Carlsson, U. & Goldberg, D. (eds.) *The Legacy of Peter Forsskål - 250 Years of Freedom of Expression*. Sweden, Nordicom, 71-91. Available from: <http://www.nordicom.gu.se/en/publikationer/legacy-peter-forsskal>
- Standish, R. (2017). Why Is Finland Able to Fend Off Putin's Information War?. Available from: <https://foreignpolicy.com/2017/03/01/why-is-finland-able-to-fend-off-putins-information-war>
- 
- Aro, J. (2016). The cyberspace war: propaganda and trolling as warfare tools. *European View*, 15(1), 121-132.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07/s12290-016-0395-5>
- Council for Mass Media (2008). The Council for Mass Media in Finland. Available from: [https://www.jsn.fi/en/Council\\_for\\_Mass\\_Media/the-council-for-mass-media-in-finland](https://www.jsn.fi/en/Council_for_Mass_Media/the-council-for-mass-media-in-finland)
- Council for Mass Media (2014). Guidelines for Journalists and an Annex. Available from: [https://www.jsn.fi/en/guidelines\\_for\\_journalists](https://www.jsn.fi/en/guidelines_for_journalists)
- European Centre for Press and Media Freedom (2016). Finnish editors speak out against defamatory 'fake media'. Available from: <https://ecpmf.eu/news/threats/archive/finnish-editors-speak-out-against-defamatory-fake-media>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CASE OF RISTAMÄKI AND KORVOLA v. FINLAND. Available from: <http://hudoc.echr.coe.int/eng?i=001-127395>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Judgments concerning Finland, Latvia, Lithuania and Serbia. Available from: <http://hudoc.echr.coe.int/eng-press?i=003-4743367-5767110>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5). Judgments of 23 June 2015. Available from: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3-5115638-6308816&filename=003-5115638-6308816.pdf>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7). Banning the mass publication of personal tax data in Finland did not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vailable from: <https://hudoc.echr.coe.int/app/conversion/pdf?library=ECHR&id=003-5767838-7331982&filename=Grand%20Chamber%20judgment%20Satakunnan%20Markkinaporssi%20Oy%20and%20Satamedia%20Oy%20v.%20Finland%20-%20ban%20on%20publishing%20tax%20data.pdf>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d.). Life of an application. Available from: [https://www.echr.coe.int/Documents/Case\\_processing\\_ENG.pdf](https://www.echr.coe.int/Documents/Case_processing_ENG.pdf)
- Freedom House (2016) Freedom of the Press 2016: Finland. Available from: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6/finland>
- Hubber, A. (2017, 12, 14). Finnish news goes robotic with Google funding. <Good News from Finland>. Available from: <http://www.goodnewsfinland.com/finnish-news-goes-robotic-with-google-funding>
- International Justice Resource Center (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vailable from: <https://ijrcenter.org/european-court-of-human-rights>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7). Journalists in Finland face ‘unprecedented’ levels of online abuse. Available from: <https://ipi.media/journalists-in-finland-face-unprecedented-levels-of-online-abuse>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2018). How a Finnish regional newspaper took on online abuse. Available from: <https://ipi.media/how-a-finnish-regional-newspaper-took-on-online-abuse>
- 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Jokela School Shooting (2009). Jokela School Shooting on 7 November 2007 - Report of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2-466-804-0>
- Investigation Commission of the Kauhajoki School Shooting (2010). Kauhajoki School Shooting on 23 September 2008 - Report of the Investigation

- Commission.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2-466-515-5>
- Jyrkiäinen, J. (2018). Finland - Media Landscape. European Journalism Centre (EJC). Available from: <https://medialandscapes.org/country/pdf/finland>
- Karjalainen (2014, 8, 14). Urpo Airaksiselle puoli vuotta ehdollista ja yli 130 000 euroa maksettavaa. <Karjalainen>. Available from: <https://www.karjalainen.fi/uutiset/uutis-alueet/kotimaa/item/54269>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A. L. & Nielsen R. K. (eds.) (2018).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8*.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Available from: <http://media.digitalnewsreport.org/wp-content/uploads/2018/06/digital-news-report-2018.pdf?x89475>
- Onali, A. (2018). Countering Online Harassment in Newsrooms: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Implemented in Finland.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Available from: <https://ipi.media/programmes/online/countering-online-harassment-in-newsrooms-finland>
- Raittila, P., Koljonen, K. & Väliverronen, J. (2010). Journalism and School Shootings in Finland 2007-2008. Tampere, University of Tampere. Available from: <http://urn.fi/urn:isbn:978-951-44-8257-1>
- Reunanen, E. (2018). Finland. in: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Levy, D. A. L. & Nielsen R. K. (eds.)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8*.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76-77. Available from: <http://media.digitalnewsreport.org/wp-content/uploads/2018/06/digital-news-report-2018.pdf?x89475>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8). Finland | RSF. Available from: <https://rsf.org/en/finland>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 Prosecutor General decides not to press charges on hate speech targeting journalist. Available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prosecutor-general-decides-not-to-press-charges-on-hate-speech-targeting-journalist>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2018). UJF: persecution of journalists must stop. Available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ujf-persecution-of-journalists-must-stop>
- The Union of Journalists in Finland (n.d.). Freedom of expression. Available

- from: <https://journalistiliitto.fi/en/ground-rules/freedom-of-expression>
- Uusi Suomi (2015). Verkkajulkaisut jatkossa vastuussa lukijoiden kommentaista?. Available from: <http://markofobbaforss.puheenvuoro.uusisuomi.fi/197215-verkkajulkaisut-jatkossa-vastuussa-lukijoiden-kommenteista?fbclid=IwAR2LJSWd8G6Y7ndcsXaSKxAyNw60xAhKP2M4XKeSmfKigNOSwuY4woEUd4k>
- Yle Uutiset (2012, 6, 8). Supreme Court orders Halla-aho to pay for hate speech.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supreme\\_court\\_orders\\_halla-aho\\_to\\_pay\\_for\\_hate\\_speech/6171739](https://yle.fi/uutiset/osasto/news/supreme_court_orders_halla-aho_to_pay_for_hate_speech/6171739)
- Yle Uutiset. (2016, 1, 28). Police to investigate anti-immigrant MV-Lehti website.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police\\_to\\_investigate\\_anti-immigrant\\_mv-lehti\\_website/8632899](https://yle.fi/uutiset/osasto/news/police_to_investigate_anti-immigrant_mv-lehti_website/8632899)
- Yle Uutiset. (2018, 4, 25). Helsinki politician's hate speech conviction upheld.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helsinki\\_politicians\\_hate\\_speech\\_conviction\\_upheld/10176704](https://yle.fi/uutiset/osasto/news/helsinki_politicians_hate_speech_conviction_upheld/10176704)
- Yle Uutiset. (2018, 8, 17). Finnish court issues precedent "right to be forgotten" decision for Google to remove data.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ish\\_court\\_issues\\_precedent\\_right\\_to\\_be\\_forgotten\\_decision\\_for\\_google\\_to\\_remove\\_data/10358108](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ish_court_issues_precedent_right_to_be_forgotten_decision_for_google_to_remove_data/10358108)
- Yle Uutiset. (2018, 10, 1). Finns Party MP at centre of storm over immigration-themed school project.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mp\\_at\\_centre\\_of\\_storm\\_over\\_immigration-themed\\_school\\_project/10432479](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ns_party_mp_at_centre_of_storm_over_immigration-themed_school_project/10432479)
- Yle Uutiset. (2018, 10, 7). Complaint to Chancellor of Justice over school's controversial immigration-themed project.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complaint\\_to\\_chancellor\\_of\\_justice\\_over\\_schools\\_controversial\\_immigration-themed\\_project/10444034](https://yle.fi/uutiset/osasto/news/complaint_to_chancellor_of_justice_over_schools_controversial_immigration-themed_project/10444034)
- Yle Uutiset. (2018, 10, 18). Anti-immigrant agitator Ilja Janitskin gets 22-month jail sentence. <Yle Uutiset>. Available from: [https://yle.fi/uutiset/osasto/news/anti-immigrant\\_agitator\\_ilja\\_janitskin\\_gets\\_22-month\\_jail\\_sentence/10463931](https://yle.fi/uutiset/osasto/news/anti-immigrant_agitator_ilja_janitskin_gets_22-month_jail_sentence/10463931)
- Ylönen, O. & Nordenstreng, K. (2007). Annex 4: Media Systems (Country Reports). In: Hans-Bredow-Institut for media research. (eds.) *Final Report: Study on*

*Co-Regulation Measures in the Media Sector.* Hamburg, Germany, the European Commission, 127-141. Available fr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study-co-regulation-measures-media-sector-2007>